

국민의힘 전대, 굳히기냐 뒤집기냐

4일 앞두고 선거인단 투표 시작 당원 투표 70%·여론조사 30% 세 후보 모두 당심 잡기 총력전

국민의힘은 7일 차기 지도부 선출을 위한 선거인단 투표를 시작했다. 최대 관심사는 '청년 돌풍'을 일으키고 있는 이준석 후보의 당락이다. 당내에서는 전대 흥행과 맞물려 이번이 역대 최고 투표율을 기록할 것이라는 기대감이 나오고 있다. 전대 선거인단은 모두 32만8893명이다.

선거인단은 전당대회 대의원, 책임당원, 일반당원 등 32만8000여명으로 구성됐으며, 7~8일 모바일 투표, 9~10일 자동응답시스템(ARS) 투표로 진행된다. 일반 시민 여론조사는 9~10일 이틀간 진행된다. 투표 결과는 선거인단 투표 70%, 시민 여론조사 30%의 비율로 반영된다.

선거인단은 당 대표 후보 1명, 최고위원 후보 2명, 청년최고위원 후보 1명에 대해 표를 행사할 수

있다. 당 대표 선거는 본선에 오른 이준석, 나경원, 주호영, 홍문표, 조경태 후보(예비경선 득표율순)가 대상이다. 최고위원에는 김재원, 도태우, 배현진, 원영섭, 이영, 정미경, 조대원, 조수진, 조해진, 천강정 후보, 청년최고위원에는 강태민, 김용태, 이용, 함승용, 홍종기 후보(이상 가나다순)가 출사표를 던졌다. 6·11 전당대회에서는 당 대표 1명과 최고위원 4명, 청년최고위원 1명이 선출된다.

당 관계자는 "역대급 흥행"이라면서 "최근 10년간 가장 떠들썩했던 2014년 7·14 전대를 뛰어넘는 투표율을 예상한다"고 내다봤다. 김무성-서정원 양강구도가 형성됐던 당시 전대 투표율은 31.7%를 기록했다.

그간 투표율이 높으면 정당활동 기간이 길고 조직력이 앞서는 중진들이 유리할 것이라는 통념이 있다. 하지만 '0선 원외' 이 후보의 돌풍으로 레이스 초반 무너지면서 투표율 자체로 유불리를 속단하기는 어렵다는 게 당내 대체적 관측이다. 굳히기에 나선 이 후보도, 추격에 나선 나, 주 후보 등

도 긴장을 풀지 못한 채 당심에 매달릴 수밖에 없는 상황인 셈이다.

상대적으로 일반시민 여론조사에 강점이 있는 이 후보도 막판까지 당원 공략에 집중할 수밖에 없는 구조다.

이 후보는 이날도 CBS 라디오에서 "TK에서 많은 지지세가 모이는 것 같다"면서 "보수 개혁의 선봉에는 또 보수의 중심이었던 대구(가 설 것)"라며 '안방 정서'를 과고했다. 나 후보는 당심을 바탕으로 한 막판 역전에 자신감을 드러냈다. 나 후보는 CBS 라디오에서 "여론조사는 분위기라면 당원 투표는 합리적 판단에 의한 선거"며 "흩어졌던 표심들이 내게 빠르게 결집하는 것을 느낄 수 있다"고 했다.

주 후보는 유일한 TK 주자로서 '보수 본산'의 저력을 보여주겠다는 각오다. 그는 휴일인 전남 중앙 TK 지역에 유세를 집중했다. 그는 이날 당원 문자에서 "대통합과 대혁신으로 대선승리"를 이루겠다며 투표 참여와 지지를 호소했다.

/오광록 기자 kroh@kwangju.co.kr·연합뉴스



백신 챌린지 SNS 캠페인 나선 민주당 더불어민주당 송영길 대표 등 지도부가 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 회의에 앞서 코로나19 예방 백신접종을 위한 '백신 챌린지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캠페인'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민의힘 입당 임박설에 선 긋는 윤석열...이준석 '장모 입장' 때문?

이 "10원 발언 결과 책임져야" 김종인 대세론 부정 발언도 영향

윤석열 전 검찰총장과 국민의힘 사이에 갈등 조짐이 보이고 있다. 최근 윤 전 총장은 '백남버 2번' (기호 2번)으로 출마해야 한다는 생각도 주위에 밝힌 상태다. 당연한 얘기지만, '평당원' 자격으로 입당할 것이라는 언론 보도도 나왔다.

윤 전 총장 측 관계자는 7일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입당 여부와 시기는 정해진 것이 없다"는 기존 입장을 반복했다. 윤 전 총장의 "전당대회 직후 입당설"에 선을 그은 것이다. 윤 전 총장 측의 반응은 자신을 향한 국민의힘 이준석 당 대표 후보의 발언

과 무관치 않다는 해석이 나온다.

당 대표 경선에서 선두에 선 이 후보는 전날 언론 인터뷰에서 "장모가 누구한테 10원 한 장 피해 준 적 없다"는 윤 전 총장 발언을 두고 "나중에 그 결과까지 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후보는 "만약 문제가 있는 사람을 문제가 없다고 옹호한 것이라면, 공사 구분에 대해 정치인의 자질로서 문제로 지적될 수 있다"라고도 했다.

그러자 윤 전 총장 주변에서는 이 후보의 발언에 "윤 전 총장에 대한 도발 아니냐"며 다소 불쾌하다는 반응이 흘러나왔다. 윤 전 총장은 자신의 장모를 "정치 공작의 피해자"로 확신하고 있는데, 이 후보는 재판으로 결백이 입증돼야 한다는 취지의 입장을 보였다는 것이다. 더구나 김종인 전 국민의

힘 비상대책위원장이 최근 "검사가 바로 대통령이 된 경우는 없다"며 윤 전 총장의 대세론에 부정적인 태도를 드러낸 것도 윤 전 총장 측을 자극한 것으로 보인다.

이 후보의 경쟁자인 나경원 후보는 이 후보와 김 전 위원장을 싸잡아 "위험한 공감대"라면서 이들이 윤 전 총장의 입당에 결정적 장애물이 될 수 있다고 지적하고 나섰다. 이 후보는 나 후보의 의혹 제기를 "광상"이라고 일축하면서 "10원 한 장 발언을 해명해주는 과정에서 윤 전 총장을 보호한 것"이라고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강조했다.

김 전 위원장 역시 "그 사람(나경원 후보)이 대표 경선에서 밀리니까 별의별 소리를 다 하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연합뉴스

송영길 "군 정비위 부리 뿔겠다"…TF 구성

더불어민주당 송영길 대표는 7일 공군 여성 부사관 성추행 사망 사건과 관련, "사건의 가해자, 은폐 가담자, 지휘 책임자 등 관련자 전원에게 대해 지우고 하를 막론하고 엄중한 책임을 물겠다"고 말했다.

송 대표는 최고위에서 "당정은 군을 완전 새롭게 조직한다는 각오로 군내 성 비위 문제를 뿌리 뽑도록 하겠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그는 "폐쇄적인 군 문화, 상벌죄 대응에 무능한 군 사법제도 등 관련 제도 전반을 확실히 손보겠다"면서 "당정은 군내 구시대적 폐습 척결에 총력

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민주당은 최고위에서 민홍철 국회 국방위원장을 단장으로 하는 군 범죄 근절 및 피해자 보호 혁신 태스크포스(TF)를 구성기로 했다.

한편 송 대표는 일부 언론의 'KF-21 시제기 해체' 보도와 관련, "방사청에 따르면 (KF-21 시제기 1호기 개별은) 현재 차질없이 진행되고 있다"면서 "시제기 사진 촬영을 허용하지 않았다는 데에 불만을 품고 이런 식의 기사를 쓰는 것에 대해 대단히 유감"이라고 말했다. /오광록 기자 kroh@

전남도 정책실명제 운영 조례안 상임위 통과

전남도 주요 현안 정책을 수립·시행하는 공직자의 실명제를 공개하는 조례안이 도의회 통과를 눈앞에 뒀다.

7일 전남도의회에 따르면 도의회 기획행정위원회 한근석 의원(더불어민주당·비례)이 대표 발의한 '전남도 정책실명제 운영 조례안'이 이날 소관 상임위원회 심의를 통과했다.

조례안은 정책실명제 책임관 지정, 대상사업의 선정과 공표 등을 담고 있다. 전남도 주요 정책 결정과 집행과정 등에 참여하는 공직자 실명 등을 공표하고 그 이력을 기록·관리함으로써 행정 투명성

과 신뢰성 향상에 기여하기 위해 발의됐다.

그동안 전라남도 정책실명제는 행정안전부 '정책실명제 운영 지침'과 도 운영 규칙 등에 따라 운영되고 있었으나, 이번 조례 제정을 통해 법적 근거가 마련될 것으로 기대된다.

한근석 의원은 "도정 핵심사업에 대해 책임소재를 명확히 함으로써 불필요한 예산 낭비를 방지하고 각종 부조리를 예방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조례안은 오는 16일 전남도의회 제353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 상정돼 처리될 예정이다. /김형호 기자 khh@kwangju.co.kr

여의도 브리핑

윤영덕, 시·도당 정책연구소 설치 법안 발의

정당의 시·도당 정책 역량을 강화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더불어민주당 윤영덕(광주 동남갑) 국회의원은 7일 "시도당에 별도 법인으로 정책연구소를 둘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은 정당의 정책개발 및 연구 활동을 촉진하기 위해 중앙당에 별도 법인으로 정책연구소를 설치할 수 있게 되어있다. 정책연구소에 대해서는 정당법상 제한된 유급 사무직원의 수를 정원 외로 운영할 수 있도록 인정하는 한편, 정당이 지급되는 경상보조금 총액의 30% 이상을 배분하게 되어 있다.



하지만 자체적으로 운영 중인 일부 시도당 정책연구소의 경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이 없어 시도당에 배정된 정원과 국고 보조금을 쪼개어 운영하고 있다. 이로 인해 지역 특성에 맞는 내실 있는 연구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개정안은 필요한 경우 시도당에 별도 법인으로 정책연구소를 도입할 수 있도록 하고, 시도당과 별도로 정원과 예산을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오광록 기자 kroh@kwangju.co.kr

서삼석, 농어업인 안전보험·재해예방법 발의

태풍, 폭우 등 재해로 인한 농수산물 생산감소의 경우 국가의 피해보상사무를 신설하고 농어업인 안전보험을 의무가입으로 사회보험화 하는 법률개정안이 추진된다.

더불어민주당 서삼석(영암무안신안) 국회의원은 7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농어업재해대책법' '농어업인 안전보험 및 안전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이하 농어업인 안전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

농어업 재해대책법개정안은 각종 재해로 인해 농산물·산림자물 또는 수산양식물의 생산량이 감소



한 경우 정부가 실태조사를 통해 적절한 피해보상 대책을 마련하도록 의무화했다. 농어업인 안전보험법 개정안은 농어업인 안전보험을 의무가입으로 사회보험화하고 농어업인이 부담하는 보험료의 국가 지원 비율을 기존 50%에서 80%로 상향하여 농작업 재해 보험제도를 최소한 산재보험 수준만이라도 개선 하자는 취지다. /오광록 기자 kroh@kwangju.co.kr

| | |
|--|--|
| 상가매매 (상무/지구) | 장성토지 (분양/매매) |
| <p>1) 감정가(시세) 9억원 매매가 5억 8천만원</p> <p>2) 보증금 3천만원, 월 250만원 (용 3억2천만원)</p> <p>3) 평수 140평, 전용 100평</p> <p><input checked="" type="checkbox"/> 중심상업지역 메가박스 영화관 앞 <input checked="" type="checkbox"/> 사무실, 바, 유흥, 모든 업종 가능</p> <p>(즉시 업무 가능, 시비 없음)</p> | <p>광주에서 20분(도로점) 장성댐(호) 2분, 장성 IC. 5분</p> <p>1) 100평 → 8천 2) 150평 → 1억1천 3) 300평 → 2억</p> <p>총 1,778평 → 9억(용 4억 가능)</p> <p>(주택, 주말농장, 창고, 투자 적합)</p> |
| 010-6670-9800 | 062-382-5500 |

꼭! 받아야 할 돈 회수

판결문, 공증·공사대금·각서·운송료·차용증
거래장부·계약서·입금 내역·녹취 등 각종채권상당

절대 수수료 출장비용 없음

(재산조사비, 법적비용은 필요에 따라 발생될 수 있음)

- 채무자 재산, 신용·주거래은행·차량 등 파악
- 실거주지 파악 가능
- 법인회사 부도시 회수 가능

24시간 상담가능

전문추심인

직접관리

선수금만 주고 돈도 못 받고 계신분들이 많으나
당사는 여러분의 재산을 회수한 후 수수료를 받고 있습니다.
당사는 내재산이라는 마음으로 항상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중앙신용정보 직통전화 **062)521-4109**
010-2860-4700